

# 민주당 8월25일 전대...당권경쟁 가열

## 전대준비위 구성 착수

### '강한 대표' 체제 전환 유력

### 송영길·전해철 등 10여명 각축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당은 곧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위원회 개편 작업도 한다. 전준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 세팅'이다. 당은 또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물 세팅과 관련해 "오늘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전준위, 조강특위 구성과 세부적인 물 세팅, 지도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회의를 열어 전준위 구성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직강화특위 구성안을 의

결한다.

차기 당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는 만큼 허마평에 오르내리는 당내 도전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후보군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 3선의 우상훈·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된다. 4선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안팎

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될 경우 후보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중 한 쪽을 선택해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군이 더욱 압축될 수 있다.

전문계에서는 최재성·전해철 의원으로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친노·친문 좌파적인 이해찬 의원은 '올드보이' 그리고 '강성친노' 이미지가 있어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문계에서는 송영길·박영선·김진표 의원 등이 다선의원으로서 안정감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 후보군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의 변수 중 하나는 김부겸 장관의 출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되면서 지역주의를 깬 상징적 인물로 각인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김 장관이 당 대표를 맡아 체급을 더 키운 뒤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대 출마가 차기 대권 도전에 유리한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바른미래, 협치 될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예를 받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쟁도 치열

### 내달 초까지 지역위 개편

### 광주 송갑석·전남 서삼석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 늦어도 7월 초까지 지역위원회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2년 임기의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재호, 서삼석, 송갑석)에 불과,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전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중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당연직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가운데 1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조강특위에서 단수로 위원장을 선정하거나 경선을 치러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 지역위원장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위원장이 대거 지방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서구갑과 북구을, 광산 갑만 제외하고 모두 대령 체제가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전·현직 위원장들의 청와대 입성설 등이 맞물리면 서 내부 역학구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지역위원장 선정은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다. 일부 성적이 좋지 않은 지역위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당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지역위원장으로 추천하거나 물밑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시도당 위원장은 8월 초순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유일한 현역인 송갑석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개호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으로 발탁된다면 서삼석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위원장 문제는 또, 21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청와대 비서관 등의 거취와 연관돼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한 비서관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당적을 정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 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 비서관들의 의중이 반영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뽑히는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직무대행 체제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비서관들은 청와대를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서관은 이미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거취는 2기 청와대 구성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어서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김성태 "한국당 당명 바꾸고 중앙당 해체"

### 혁신 주도 '월권' 지적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 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명을 개칭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면서 "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면서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서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권한대행은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를 동시 가동키로 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당내 인사가 혁신 전권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당 해체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의결기구를 거쳐야 하는 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맞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지는 의견도 있는 등 당내에 반발 기류가 있어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김 권한대행이 당내 혁신 작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내 의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김 권한대행이 '월권'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안의 내용과 발표 절차를 놓고도 뒷말이 많다. 중앙당 해체나 당명 개칭, 원내 중심 정당 구축 등의 혁신안은 선거에서 패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아주 낡은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평화당, 선거 참패 책임 '뒤늦은 내용'

민주당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뒤늦게 내용이 휩쓸릴 조짐이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평화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21명의 평화당 지역위원장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선당후사 차원에서 당이 재창당 수준으로 일신할 수 있도록 새 출발의 길을 열어 달라"며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비대위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당헌에 규정된 시한인 8월 말보다 앞당겨 7월 말까지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단체장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바른미래당에 비해 5명을 당선시켜 당의 명맥을 유지했다며 위안 삼을 수도 있다"면서도 "1%에도 미치지 못한 비호남권 정당 득표율과 광주, 전북에서 정의당보다 뒤진 정당 득표율의 결과는 우리 당의 분발과 쇄신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8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7월로 앞당겨 치르는 방안은 물론 비대위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놓고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바른미래당 정체성 찾나... 오늘 워크숍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20일 이틀간 양평 용문산에서 워크숍을 한다.

이 자리에는 비상대책위원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 당의 정강·정책에서부터 그간 이견이 불거졌던 모든 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른바 정체성 찾기도. 당 내부 모든 문제가 당 정체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중도개혁 대 개혁보수'를 둘러싼 노선갈등을 이번에도 말끔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이 하나가 되려면 이견을 통합해선 안되고 다 꺼내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당이 지향하는 이념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출신들은 당이 지향할 노선으로 '중도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일각에선 '개혁보수'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 정책을 두고도 이견이 가장 크다. 합당 당시 국민의당 출신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바른미래당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려 했지만,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제3의 길'을 내세우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국민의당 출신들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보수정당 출신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등 시각차가 분명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